

#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 간 부 후 보 2 교 시 (일 반)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과목별 코드번호

※ 시험 과목 : 해양경찰학개론(10), 범죄학(13),  
행정법(01), 행정학(03), 헌법(12)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해 양 경 찰 청

해양경찰학개론

1.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법」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 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
  -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두고,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교대근무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변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해양사고 빈발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조거점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조거점파출소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 ④ 구조거점파출소에는 잠수구조요원을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지문(指紋)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상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유류지문이라 한다.
  - ② 손 끝에 묻은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으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역지문이라 한다.
  - ③ 잠재지문 채취방법 중 초산은 용액법을 사용하면 자색으로 현출된 지문을 검출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상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 지문이 아닌 지문을 관계자지문이라 한다.

4.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함정의 명명은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 ② “통합대기근무”란 대형함정, 중형함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 동일한 장소에 정박계류시 통합하여 대기근무를 편성·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복수승조원제”란 경비함정 출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를 말한다.
  - ④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과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함정의 지휘권을 갖는다. 다만, 파출소에 배치된 함정에 대한 지휘권은 파출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다음 <보기>의 목적을 규정한 법령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①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0. 다음 중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인보호주무자”란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을 말하며, 해양경찰서의 당직사령·당직관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일과 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②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③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은 유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리하여 유치해야 한다.
- ④ “간이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지면서 하는 검사를 말한다.

11.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상에서의 불법적인 점거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청은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 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수역등 또는 수역등의 밖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해양경찰서장은 불법적으로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한 자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2. 다음 <보기> 중 정보배포의 원칙과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정보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 ㉡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되어야 한다.
  - ㉢ 정보의 배포는 정보의 순환과정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이다.
  - ㉣ 정보는 먼저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 ㉤ 특별보고서란 매일 24시간에 걸친 제반 정세(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며 신속한 전달이 필수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중 방첩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첩의 기본원칙으로 완전협조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을 들 수 있다.
- ② 계속접촉의 유지는 탐지, 판명, 주시, 이용, 타진(검거)의 단계이다.
- ③ 방첩기관이 간첩을 발견했다고 해서 즉시 검거해서는 안 되며, 조직망 전체를 파악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형·무형의 접촉을 해야 한다.
- ④ 방첩의 수단 중 적극적 수단으로 허위정보 유포, 양동간계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들 수 있다.

14.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선박 내에서 통항 중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
- ②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 ③ 그 선박의 선원이나 기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가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 ④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 다음 중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상 외국군함과 외국 선박에서의 수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도주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신속히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범죄인 체포 등 수사에 있어 급속을 요할 때에는 그 신병의 인도를 위해 출입할 수 있다.
- ②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한다.
- ③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써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한다.
- ④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6. 다음 중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헌장은 국제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라 경찰기관들의 국제공조기구의 헌장일 뿐이므로 외교적 서명이나 정부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간의 현행범 범위 내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국간 가능한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는 회원국 상호간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또한 범인 체포 및 인도에 있어서 상호 신속·원활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형사경찰의 정부간 국제공조 수사기구이다.
- ④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는 자체 내에 국제 수사관을 두어 각국의 법과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수사하는 국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17. 다음 중 「해양경찰법」 상 해양경찰의 직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간첩·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④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해양경찰 행정응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직무 응원법」 상 경찰응원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한 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해상에서 행정응원의 기본법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다.
- ④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수난 구호를 위해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있다.

19. 다음 중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형방제작업선”이란 총톤수 50톤 미만의 방제정을 말한다.
- ② 해양경찰서장은 관할해역 내 선박 밀집 항만 또는 항행이 빈번한 항로 등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해역에 방제함정을 배치·운용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훈련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에서 다른 해역으로 방제함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 ④ 방제함정이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이동한 때에는 방제대책본부장 또는 관할 해역의 해양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0.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해체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오염물질의 처리실적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군함과 경찰용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유조선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1.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법」 및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상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4년이 지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 ㉢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 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22. 다음 <보기>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등록재산의 공개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계급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중 략 -

8. ( )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① 경사      ② 경위      ③ 경무관      ④ 치안감

23.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법」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 「해양경찰법」 제4조(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 )월 ( )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 )월 ( )일로 한다.

- ① 44      ② 46      ③ 60      ④ 62

24. 다음 중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세계의 해상치안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일본 해상보안청(JCG)은 항로표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일본 해상보안청(JCG)은 해상안전 확보 차원에서 해저지형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④ 대한민국 해양경찰, 미국 해안경비대(USCG), 일본 해상보안청(JCG)의 신분은 모두 경찰관이다.



25.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 상 함정 안전관리 점검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검항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야간 항해 중 함외 출입 통제 여부
- ② 안전모·안전화 등 이용·관리 실태
- ③ 승조원 안전장구·장비 사용법 등 안전 교육·훈련 실시 여부
- ④ 함외 갑판상 안전 구조물 야광테이프 부착 및 미끄럼 방지 페인트 실태

26. 다음 중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상 수사본부 설치 대상이 되는 중요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3인 이상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 ② 기름 또는 유해물질 30 kl 이상 해양오염사고
- ③ 방화사건
- ④ 선박의 충돌·침몰·도주사건

27.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 ② “재난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③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 ④ 국무총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28.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청의 직접적인 소관법률을 나열한 것이다. 그 제정시기를 시간적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해양경비법」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

② ㉠→㉣→㉡→㉢

③ ㉡→㉣→㉠→㉢

④ ㉡→㉠→㉢→㉣

29.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상 일일근무지정 관련,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이 지역의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 ② 순찰인력 및 가용 장비
- ③ 시간대별, 장소별 안전관리 및 치안수요
- ④ 관할 해안선, 해역 및 교통, 국가중요시설 등

30. 다음 <보기>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대상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인 수상형 체험활동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인 수상형 체험활동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인 수중형 체험활동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인 수중형 체험활동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인 일반형 체험활동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5명인 일반형 체험활동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1.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포함)」 상 연안교통관제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태안

㉡ 군산

㉢ 진도

㉣ 통영

㉤ 동해

㉥ 제주

① ㉠, ㉤

② ㉡, ㉥

③ ㉢, ㉣

④ ㉣, ㉤

32. 다음 중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상 경비비상의 등급별 세부사항으로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을호비상 -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해상 경비수요가 증가하여 가용 경력을 5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을호비상 -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사회적 혼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③ 병호비상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 ④ 병호비상 -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해상 경비수요가 증가하여 가용 경력을 3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3. 다음 중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상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해양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소집되어 상황을 처리하는 팀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황기획팀                      ② 상황지원팀  
③ 상황관리팀                      ④ 상황대책팀

34.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 기상특보 중 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한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 기상특보 중 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용한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다음 중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상 인명구조장비함 장비 비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명조끼 1개 이상  
② 구명튜브 1개 이상  
③ 구명불 1개 이상  
④ 구명줄 1개 이상(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

36.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수난구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조된 선박의 선장 및 선원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③ 조난된 물건을 습득한 자  
④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37. 다음 중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20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③ “성(性)적 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④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8. 다음 중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처분”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제작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운용”이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정비·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③ “관리”란 해양경찰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해양경찰장비관리자”란 해양경찰장비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9. 다음 중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 북태평양 해양경찰회의(NPCGF : 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 가입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    ② 싱가포르    ③ 캐나다    ④ 러시아



40.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 상 출동 중 표준일과표 근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함정 행사 지원 등으로 표준일과표대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함정장이 판단할 시
  - ② 다수의 승조원들이 외국어선 단속·해양사고 대응 등 상황 발생으로 휴식을 하지 못하여 표준일과표대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함정장이 판단할 시
  - ③ 야간이나 협수로 또는 선박운항 밀집해역 등을 항해할 때 함정장이 판단할 시
  - ④ 기상 불량, 미세먼지·흑서기·흑한기·대설 등 기상 이변 발생시

## 범죄학

1. 다음 중 레크리스(W.Reckless)의 범죄피해자 유형 분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해자의 유책성(귀책성)
- ② 피해자의 도발유무
- ③ 피해자의 외적특성과 심리적 공통점
- ④ 일반적 피해자성과 잠재적 피해자성

2. 다음 중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슈어(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② 베커(Becker)는 일탈자라는 낙인은 그 사람의 지위를 대변하는 주된 지위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 ③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며, 공식적 낙인은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④ 레머트(Lemert)는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3. 다음 중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애착(Attachment)’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맺는 감성과 관심으로, 이를 통해서 청소년은 범죄를 스스로 억누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참여(Involvement)’는 관습적 활동 또는 일상적 활동에 열중하는 것으로, 참여가 높을수록 범죄에 빠질 기회와 시간이 적어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 ③ ‘신념(Belief)’은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 행동에 대해 과잉반응하지 않고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 ④ ‘관여 또는 전념(Commitment)’은 관습적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에너지·노력 등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비행을 저지름으로써 잃게 되는 손실이 커져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다음 중 코헨(Cohen)이 주장한 비행하위문화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정성(Negativism)
- ② 악의성(Malice)
- ③ 자율성(Autonomy)
- ④ 비합리성(Non-utilitarianism)

5. 다음 중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화가 범죄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 ② 범죄는 개인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들을 범죄의 근원적 원인으로 본다.
- ③ 범죄의 발생이 비공식적인 감시기능의 약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 ④ 버식(Bursik)과 웹(Webb)은 사회해체 원인을 주민의 비이동성과 동질성으로 보았다.

6. 다음 중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적 영향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②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어린 시절 형성된 자기통제 능력의 결핍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성인기 사회유대의 정도가 한 개인의 자기통제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④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자기통제능력의 상대적 수준이 부모의 양육방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7. 다음 중 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통제이론은 “개인이 왜 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가”의 측면이 아니라 “개인이 왜 범죄를 하게 되는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 ② 나이(Nye)는 범죄 통제방법 중 비공식적인 직접 통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레크리스(W.Reckless)는 외부적 통제요소와 내부적 통제요소 중 어느 한 가지만 제대로 작동되어도 범죄는 방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마차(Matza)와 사이크스(Sykes)가 주장한 중화 기술 중 ‘가해의 부정’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러한 피해를 입어도 마땅하다고 합리화하는 기술이다.

8. 다음 중 범죄원인에 대한 사회과정이론(Social Process Theory)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실패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 ②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를 학습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아동기에 형성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 ④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약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9. 다음 중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퀴니(Quinney)는 대항범죄(Crime of resistance)의 예로 살인을 들고 있다.
- ② 부모 등 가족구성원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서 비행을 그만두는 것은 사회유대의 형성 방법으로서 애착(Attachment)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③ 중화기술이론에서 세상은 모두 타락했고, 경찰도 부패했다고 범죄자가 말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 ④ 레크리스(W.Reckless)는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요인으로 불안감을 들고 있다.

10. 중학생 A는 어느 조직폭력단 두목의 일대기에 심취하여 그의 행동을 흉내내다가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다음 중 A의 범죄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 ② 그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 ③ 셀린(Sellin)의 문화갈등이론
- ④ 터크(Turk)의 권력갈등론

11. 다음 중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가석방은 특별예방보다는 일반예방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 ③ 가석방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할 수 있다.
- ④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다음 중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에 대한 10가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지박약성 - 모든 환경에 저항을 상실하여 우왕좌왕하고, 지능이 낮은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인내심과 저항력이 빈약하다. 상습범, 누범에서 이러한 정신병질이 많이 발견된다.
- ② 기분이변성 - 기분 동요가 많아서 예측이 곤란하고, 폭발성과 유사하나 정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화범, 상해범에서 이러한 정신병질이 많이 발견된다.
- ③ 무력성 - 심신의 부조화 상태를 호소하여 타인의 동정을 바라고 신경질적인 특징을 보이며,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다.
- ④ 발양성 - 자신의 운명과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이며, 경솔하고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 상습사기범과 무전취식자 등에서 이러한 정신병질이 많이 발견된다.

13. 다음 중 샘슨(Sampson)과 라웁(Laub)의 생애과정 이론(연령-단계이론)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고난 기질과 어린 시절의 경험만이 범죄행위의 지속과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② 행위자를 둘러싼 상황적·구조적 변화가 범죄로부터 단절된 삶으로 이끈다.
- ③ 생애과정을 통해 사회유대와 범죄행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
- ④ 결혼, 취업, 군입대는 범죄궤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인생의 변곡점이다.

14. 다음 중 고전학과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학파는 범죄의 원인보다 형벌 제도의 개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② 고전주의 범죄학은 계몽주의 시대사조 속에서 중세 형사사법 시스템을 비판하며 태동하였고, 근대 형사사법 개혁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 ③ 파놉티콘(Panopticon) 교도소를 구상하여 이상적인 교도행정을 추구하였다.
- ④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결정론을 주장하였다.

15. 다음 중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에 의한 범죄화와 범죄에 대한 대응을 중시한다.
- ② 종래의 형사정책이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전환을 주장한다.
- ③ 경찰의 역할로서 지역사회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한다.
- ④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16. 다음 설명 중 그 내용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범죄 발생의 3요소 중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
- ② 합리적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따르면, 범죄자는 범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처벌의 가능성과 강도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 ③ 신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은 실증주의 범죄학 및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관련이 있다.
- ④ 합리적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사람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는 경제학의 기대효용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17. 다음 중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암수범죄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범죄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 ② 신고에 따른 불편, 수사기관 출두의 번거로움, 보복의 두려움은 절대적 암수범죄의 발생 원인이다.
- ③ 수사기관의 낮은 검거율과 채증력,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이다.
- ④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직접적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18. 다음 중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억제는 전과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에 중점을 둔다.
- ② 억제는 고전주의 범죄학과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이다.
- ③ 효과적인 범죄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이 확실하고 엄격하며 신속해야 한다.
- ④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론적 근거 중 하나이다.

19. 다음 중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응형(Conformity)'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승인하는 적응방식으로 반사회적인 행위유형이 아니다.
- ② '퇴행형(Retreatism)'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부정하고 사회활동을 거부하는 적응방식으로 만성적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부랑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③ '순응형(Conformity)'은 안정적인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행위유형으로서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할 때 나타난다.
- ④ '혁신형(Innovation)'은 문화적인 목표에 집착하여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성공을 달성하려는 행위유형으로 이욕적 범죄가 대표적이다.

20. 다음 중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하위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류계층의 비행이 반항도 혁신도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관심의 초점을 따르는 동조행위라고 보았다.
- ② 하류계층의 비행을 중류층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코헨(Cohen)의 주장에 반대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하류계층문화 자체가 집단비행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 ③ 하류계층의 문화를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로 분류하였다.
- ④ 하류계층의 대체문화가 갖는 상이한 가치는 지배계층의 문화와 갈등을 초래하며, 지배집단의 문화와 가치에 반하는 행위들이 지배계층에 의해 범죄적·일탈적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하였다.

21. 다음 중 학자와 그 주장의 내용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이(Nye)는 가정을 사회통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 ② 레크리스(W.Reckless)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은 청소년비행의 요인으로 내적배출요인과 외적유인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 ③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은 중산계층이나 상류계층 출신이 저지르는 비행이나 범죄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④ 클로워드(Cloward)와 오린(Ohlin)의 범죄적 하위문화는 합법적인 기회구조와 비합법적인 기회구조 모두가 차단된 상황에서 폭력을 수용한 경우에 나타나는 하위문화이다.



28. 다음 중 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황적 범죄예방 모델’은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 ② ‘범죄자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모델’은 주로 형집행단계에서 특별예방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모델’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요구한다.
- ④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주택 및 도시설계를 범죄예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려는 생각이다.

29. 다음 중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델은 질병예방의 보건의료모형을 차용하였다.
- ② 범죄 실태에 대한 대중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1차적 범죄예방에 가장 가깝다.
- ③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판별하고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2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2차적 범죄예방은 특별예방과 관련이 있다.

30. 다음 중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부과할 수 있다.
- ② 소년법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 ③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 다음 중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단계에서의 범죄예측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② 통계적 예측방법은 여러 자료를 통하여 범죄예측 요인을 수량화함으로써 점수의 비중에 따라 범죄 또는 비행을 예측하는 것으로 점수법이라고도 한다.
- ③ 임상적 예측방법은 전문가의 개인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④ 글룩(Gluck) 부부는 범죄예측과 관련하여 가중 실점방식이라는 조기에측법을 소개하였다.

32. 다음 중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③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33. 다음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②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 ③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방화범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이다.

34. 다음 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② 검사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피치료감호자들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35. 다음 <보기>는 사이크스(Sykes)와 마차(Matza)의 중화기술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해당되는 유형은 무엇인가?

— < 보기 > —

범죄자 A는 경찰, 검사, 판사들은 부패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행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합리화한다.

- ①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 ②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 ③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
- ④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36. 다음 중 「소년법」상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역 또는 금고로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19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②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에서 5년, 15년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 ④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37. 다음 <보기>에서 현행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 중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38. 다음 <보기> 중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 초범자와 같이 개선의 여지가 큰 범죄자를 모두 기소하여 전과자를 양산시키고, 무의미한 공소제기와 무용한 재판 등으로 인하여 소송경제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 ㉡ 「소년법」상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의 선도를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공소권 행사에 있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 ㉣ 피의자에게 전과의 낙인 없이 기소 전 단계에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법원 및 교정기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39. 다음 중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벌은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이다.
- ② 일원주의에 따르면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 ③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한 것으로 책임능력이 있어야 부과되는 제재이다.
- ④ 이원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책임을,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양자는 그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40. 다음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 중 부모의 경우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③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행정법

1.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의 성격에 비추어 「건축법」상 시정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정 명령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 ③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사건에서 처분성을 긍정하면서도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요건미비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 ④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 「건축법」상 허가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X)가 바른 것은?

- 가.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라.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로부터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부 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 ① 가(○), 나(○), 다(○), 라(○)
- ② 가(X), 나(○), 다(X), 라(○)
- ③ 가(X), 나(X), 다(○), 라(○)
- ④ 가(○), 나(○), 다(○), 라(X)

4.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을 특정한 일시까지로 한정하지 않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의 ‘일시적 폐쇄’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강학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이므로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④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6. 다음 중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② 「국가배상법」의 과실은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 ③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발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외관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된다.
- ④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될 수 있다.

7. 다음 중 경찰지도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구명조끼 착용 계몽
- ② 해상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 ③ 정신착란자 보호조치
- ④ 해상쓰레기 투기금지 계도

8. 다음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국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고, 이러한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건물의 3층 난간을 넘어 흡연을 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이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 ④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9. 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한다.
- ②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만 존재한다.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현물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④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10.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④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 ㉡ 국가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
- ㉢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행위
-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
- ㉤ 국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결정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취소소송에 대한 사항은?

- ① 소송의 대상
- ② 사정판결
- ③ 제소기간
- ④ 행정심판과의 관계(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13. 다음 중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의 권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에서는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 ②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하여 하급행정청에 재위임할 수 없다.
- ③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 일부에 한해서 가능하고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권한의 위임에 관한 개별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와 같은 일반적 규정에 따라 행정청은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14.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처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기존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5. 다음 중 조세 부과 등에 관한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④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공무원인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甲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던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징계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 ③ 甲에게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甲이 형사절차에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임용권자가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17.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 ②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되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토지 이외의 물건은 환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18.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A기업이 해안지역 타인의 토지에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매장하였다. 그 토지소유자 甲은 이를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하였다. 그런데 매장된 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심각한 환경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 제거를 위한 경찰작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원칙은?

- ① 경찰책임의 원칙
- ②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③ 민사관계불개입의 원칙
- ④ 경찰비례의 원칙

19. 다음 중 경찰권의 행사 및 그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그에 불응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는 위법하다.

20. 다음 중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는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이며,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 ②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 ④ 「국유재산법」의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1. 다음 중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무효이다.
- ② 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④ 법률유보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22.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문의 금지규정이 있거나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③ 민법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 존속력,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23. 다음 중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②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 ③ 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룰 수 있다.
- ④ 교육에 관한 시·도의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24.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 ③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도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될 필요는 없다.
- ④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5. 다음 <보기>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위 세 가지에 목적의 정당성을 더하여 판단하고 있다.
- ㉡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는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실효되기 위하여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의 통제 법리와 관련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다음 중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도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 ②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③ 법규정의 일체성에 의해 요건 판단과 효과 선택의 문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을 인정한다.
- ④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포 등 소지 허가는 기속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27.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 ②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도 있다.
- ③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28. 다음 중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의 근거법규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
- ② 행정개입청구권은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통하여 행사될 수 있다.
- ③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이다.
- ④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29. 다음 중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효력 유무 또는 부인이 선결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조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②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던 乙이 무허가영업을 한 죄로 기소되자 그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 ③ 丙이 영업허가를 취소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 ④ 丁이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조치명령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30.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쟁송방식에 있어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무효확인소송 외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 ②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정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후행행위에의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 ③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 ④ 양자의 구별기준으로는 중대·명백설이 통설 및 판례이다.

31. 다음 중 허가에 붙은 기간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의 성질 및 허가기간의 연장을 위한 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한의 성질	허가기간 연장요건
①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종기 도래 후 상당 기간 내 허가기간 연장신청 필요
②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종기 도래 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 필요
③	허가 유효기간	종기 도래 후 상당 기간 내 허가기간 연장신청 필요
④	허가 유효기간	종기 도래 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 필요

32.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라면 이익형량에 따른 철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허가가 갱신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의 범위반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다가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관의 독립적 취소가 가능하다.
- ④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없이 당연히 부담이득이 된다.

33.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다음 중 허가, 특허 및 인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 ②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기속행위이다.
- ③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 ④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5.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 ②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되게 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 ③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④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36. 다음 중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 ②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직권취소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 ④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승인을 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는 후 1년이 도과한 경우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7.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동법상의 허용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주체가 부담한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④ 「행정절차법」도 비밀누설금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8.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②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협약의 해지통보는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는 공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9. 다음 중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벌은 장래에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이며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②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40.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송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할 경우 행정청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를 얻어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학

1. 다음 중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음 중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재는 소비의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이다.
- ② 공유재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 ③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공공이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 ④ 공유재의 보존을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및 근거로 작용한다.

3. 다음 중 정부실패의 일반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제 내에서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② 경제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관리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부족해 생산의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경제주체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외부효과로 인하여 과대 또는 과소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 ④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로 인해 비용에 대해 둔감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4. 다음 중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기관이 조사·검사·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된 사무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 ② 공공서비스 전달의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 ③ 정치적 관점에서는 관료제가 자기조직의 이익 확대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수직적으로 추진되었다.

5. 다음 중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BTO 방식	BTL 방식
㉠ 실제운영의 주체	민 간	정 부
㉡ 운영시 소유권	정 부	민 간
㉢ 투자비 회수방법	사용료	임대료
㉣ 소유권 이전시기	준 공	준 공

- ① ㉠                      ② ㉡                      ③ ㉢                      ④ ㉣

6. 다음 중 행정학의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태론적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기초로 행정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 ② 생태론적 접근에 따르면, 행정도 일종의 유기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과 상호의존적 존재로 본다.
- ③ 생태론자들은 서구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 잘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이질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 ④ 생태론적 접근의 분석수준은 유기체로서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며, 미시적 차원에서 행정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7. 다음 중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익들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 ② 행정의 민주성이란 정부가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 관리 및 운영과는 관계 없는 개념이다.
- ③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과 각각 관계가 깊다.
- ④ 가외성의 장치로는 법원의 3심제도, 권력분립, 만장일치, 계층제 등이 있다.

8. 피터스(B. Guy Peters)의 정부모형 중 다음 <보기>의 설명과 관련있는 모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 관료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 부서의 많은 내부규제가 문제이다.

- ① 시장적 정부모형      ② 참여적 정부모형  
③ 신축적 정부모형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

9. 다음 중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진세·사회보장·사회간접자본정책 등이 그 예이다.  
② 표준운영절차나 상례적 절차를 확립하여 원활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③ 부나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  
④ 정책참여자들 간 이해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0. 다음 중 정책의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왜곡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② 선행변수는 독립변수에 선행하여 작용함으로써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③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④ 혼란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게 만드는 제3의 변수이다.

11. 다음 중 매틀랜드(Matland)가 모호성(ambiguity)과 갈등(conflict)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정책집행사항 중에서,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갈등은 매수(side payment)나 담합(logrolling)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②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이 중요해진다.  
③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목표의 해석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④ 정책집행과정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12. 다음 중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③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④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13. 다음 중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과정 중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다.  
② 정치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전환, 선거에 따른 행정부나 의회의 인적 교체, 이익집단들의 로비 활동과 압력행사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③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은 상호의존적 경로를 따라 진행된다.  
④ 정책의 흐름은 문제를 검토하여 해결방안들을 제안하는 전문가들과 분석가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여러 가능성들이 탐색되고 그 범위가 좁혀진다.

14. 다음 중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②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기초가 된다.  
③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선형 경향 추정(linear trend estimation)이다.  
④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활용한 분석모형에서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15.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르면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모두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욕구는 충족되어도 단순히 불만을 예방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 예방 효과만 가져오는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 ②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비교대상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보다 크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불형평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른 심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평성 추구의 행동을 작동시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 ③ 엘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계층론을 받아들여 한 계층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다음 계층의 욕구를 중요시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한 계층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로 하위욕구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고 주장한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동기의 정도는 노력을 통해 얻게 될 중요한 산출물인 목표달성, 보상, 만족에 대한 주관적 믿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특히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인 기대치의 정도가 동기부여의 주요한 요인이다.

16.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들러(F. Fiedler)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리더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리더십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다.
- ③ 하우스(R.J. 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따르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 ④ 허시(P. Hersey)와 블랜차드(K. 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효과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리더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한다.

17. 다음 중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서 간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을 수직적 분화라고 한다.
- ②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시설과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 공식화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수준을 의미한다.
- ④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18. 다음 중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동조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 ‘전문화로 인한 무능’ 현상이 발생한다.
- ②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 ③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 ④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번문욕례(red tape)현상이 나타난다.

19. 다음 중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여 정치적 중립 보장과 실적제 발전에 유리하지만, 인사행정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② 비독립단독형은 인사정책의 신속한 결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와 미국의 인사관리처(OPM)가 있다.
- ④ 우리나라 중앙인사관장기관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 등이 있고, 감사원사무총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20. 다음 중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적 상황론은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 ② 조직군생태론은 횡단적 조직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동형화(isomorphism)를 주로 연구한다.
- ③ 거래비용이론의 조직가설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에 의한 거래비용의 증가 때문에 계층제가 필요하다.
-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21. 다음 중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갈등해소를 위한 경쟁(competition)전략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 ② 갈등관리 방안 중 협동(collabor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 ③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타협(compromise)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 ④ 조직 내 하위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22. 다음 중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여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크랜츠(Kranz)는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의 구성 비율까지도 총인구 비율에 상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주의 인사를 통해 수평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다.

23.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 ②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해양경찰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④ 감사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실적주의와 직업 공무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4. 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가 관장하고, 공무원 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운용한다.
  - ㉡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의하면 기여금은 최대 33년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고 있다.
  -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원도 공무원연금의 대상이지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 ㉣ 퇴직연금의 재원은 정부와 공무원이 분담하는 반면, 퇴직수당은 정부가 단독 부담한다.
  - ㉤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5. 다음 중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김대중 정부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다.
- ②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대상(pool)에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외무직)도 포함된다.
-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 ④ 개방형직위제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20%), 공모 직위를 통한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경쟁(30%), 부처 자율인사(50%)로 구분하여 충원된다.

26. 다음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직위분류제의 주요 구성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계급제는 출신, 연공서열 등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조하므로 보수 및 직무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③ 직위분류제는 순환근무를 통해 신축적인 인사정책이 가능하여 일반행정이 양성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비교하여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27.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②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이 감액되며(재직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50%, 5년 미만인 경우 25%), 퇴직수당은 50% 감액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이 될 수 없다.

28. 다음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은 1883년 펜들톤법(Pendleton Act)에서 최초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였고, 1939년 해치법(Hatch Act)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였다.

②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무감각을 조장하여 참여관료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④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고, 자율적 자기 통제를 통한 정당 정치 발전에 이바지한다.

29. 다음 중 「국가재정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30. 다음 중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④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31. 다음 <보기>의 정부회계제도의 구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

㉠ 현금의 수납될 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현금의 지급될 때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재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자기검증 기능을 통해 예산집행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

① 현금주의 단식부기

② 발생주의 단식부기

③ 현금주의 복식부기

④ 발생주의 복식부기



36. 다음 중 신성과주의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성과주의예산은 1990년대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 ② 예산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한다.
- ③ 미국 클린턴 정부의 1993년 「행정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GPRA)은 결과 지향적 예산을 위한 입법으로 의회의 예산감시국(GAO)에서 추진하였다.
- ④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는 것으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다.

37. 다음 중 우리나라 재정개혁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94년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시행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은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2006년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공무원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성과금을 받을 수 없다.
- ④ 2007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이 구축되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정부의 재정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있다.

38. 다음 중 정보사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에서는 계층적 분화가 더욱 촉진되어 조직 계층의 수가 증가한다.
- ② 정보사회의 조직은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나 가상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향이 있다.
- ③ 정보사회는 계급 욕구보다 고급욕구에 의한 동기 유발, 조직 내 개인 간 경쟁 가속화, 유연한 근무 문화 등의 특징을 보인다.
- ④ 정보의 그레샴(Gresham) 법칙은 좋은 정보는 소장되고 불필요한 정보만 유통되는 현상으로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나타낸다.

39. 다음 중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심화되는 현대행정 국가에서는 외부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②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Ombudsman) 성격을 가지고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0. 다음 중 각국의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80년대 이후 OECD 선진국들은 주로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② 미국에서는 클린턴(Clinton) 행정부가 공무원 중심인 국정성과평가팀(NPR)을 구성하고 1993년 고객주의, 분권화, 성과주의, 감축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혁신백서인 Gore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③ 영국에서는 품질의 표준화를 통한 고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 시민헌장제도가 1996년 서비스 제일주의로 개편되었다.
- ④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에서는 로드맵에 입각한 체계적인 개혁을 강조하면서 부처 간 통폐합과 감축관리, 지방분권, 부총리제 폐지 등 조직구조 개편에 치중하였다.

## 헌 법

1. 다음 중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 ② 정당은 단순한 시민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2. 다음 중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는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뜻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상 요구되는 제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 ② 국가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 ③ 평화추구이념을 「헌법」 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평화적 생존권은 기본권성이 인정된다.
- ④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다음 중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③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발의하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면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4. 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나라의 경우 제8차개정 헌법(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이를 규정하였다.
- ②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등에 접수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나 일상생활에서 사적 의사소통을 위해 작성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수상레저안전법」 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구 「수상레저안전법」 상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추구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5. 다음 중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③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6. 다음 중 우리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대법원이 위헌 법률심사를 담당하였다.
- ②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 ③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하였다.
- ④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피의자까지 확대 인정하였다.

7. 다음 중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소소송 등의 제기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보호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한 것에 대해 해당 시·도지사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발할 수 있도록 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8. 다음 중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 ② 「공직선거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이라도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다.
- ③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 ④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9. 다음 중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 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 ② 법적안정성의 객관적 요소로서 신뢰보호원칙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 ③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
- ④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10. 다음 중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할 의무는 있으나, 청원인이 청원한 내용대로의 결과를 통지할 의무는 없다.
- ③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조항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청원사항의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1. 다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헌법」 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 ②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윤리적 소양,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할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 국민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2. 다음 중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국가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과 환경침해적 행위를 억제하고 환경보전에 적합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④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3. 다음 중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에 관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범죄피해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에는 「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
- ④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14. 다음 중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또는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은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므로, 국립교육대학교 등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수시모집에 지원하려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게 적극적 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므로,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15. 다음 중 기본권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한다.
- ② 충돌하는 기본권이 반드시 상이한 기본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 ④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수 없어, 노동조합에서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16. 다음 중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에서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 ②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 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여타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 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17. 다음 중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재판을 받을 권리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8. 다음 중 근로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내포하므로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③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들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19. 다음 중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 ②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 ③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 ④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도록 하는 것은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 다음 중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제도
  - ② 연좌제 금지
  - ③ 일사부재리 원칙
  - ④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21. 다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권은 그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이지, 국가가 기본권 주체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도록 국가에게 요청할 권리는 아니다.
  -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연고가 없는 자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2. 다음 중 「헌법」 상 영토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환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북한의 주민일 경우 그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 ②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 ④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23. 다음 중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4. 다음 중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공무담임에 관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현행 「헌법」은 공무담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요구하지만,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25.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그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② 야간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대인의 근무·학업 시간이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③ 국회의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하여지는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④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26.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포승으로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③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동행계호행위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④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 따르면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 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영창처분은 징계구금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며 영장주의도 위반하였다.

27.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 ②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에 의하여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④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28.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 ②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므로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③ 국민들의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29. 다음 중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운전 중의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운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② 열 손가락 지문날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은 국가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개입한다거나 그 윤리적 판단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지만,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④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 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 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30. 다음 중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 ②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 제2항 등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 관련 물품을 착용하는 행위는 복장 등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의 단계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집필은 문자를 통한 모든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의 사전심의절차를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전심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서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1. 다음 중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 ②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 ③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2. 다음 중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뿐만 아니라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 역시 헌법적으로 보호된다.
-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③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나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갖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의견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집회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
-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3. 다음 중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근로의 권리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후자는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요구하는 바, 직장변경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 ③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④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4. 다음 중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②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35. 다음 중 현행 「헌법」 상 재산권 보장 관련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③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④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다음 중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여권법」 규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귀국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외 이주의 자유와 해외여행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37. 다음 중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민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있어서 그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의 공무원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득권으로서 그 침해 내지 제한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 ③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에 의하여 일반 응시자들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이는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④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

38. 다음 중 언론·출판·집회·결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 ③ 집회는 내적 유대뿐만 아니라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을 전제로 한다.
  - ④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9. 다음 중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적 결사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기 어렵고, 다만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경비를 보조한다.
  - ②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③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규범이 아니다.
  - ④ 정당은 국민 일반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구실과 같은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한다.
40. 다음 중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전기통신감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 ②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③ 미결수용자의 일반인에 대한 서신 및 변호인에 대한 서신의 검열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 ④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에게 온 서신에 ‘허가 없이 수수되는 물품’인 녹취서와 사진이 동봉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서신수수를 금지하고 발신인인 청구인에게 위 물품을 반송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